

미래 예비군 운용 혁신 방향 고찰 연구

윤준업* · 윤천성**

초 록

본 논문은 미래의 예비군 운용 혁신 방향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군 체제를 미래 안보 환경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예비군 관련 논문과 서적, 정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미래 예비군 업무 혁신 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미래의 예비군은 현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투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자율 로봇, 드론과 같은 기술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은 신속한 대응능력과 유연성을 키워야 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 있어 예비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근 예비군 확대와 여성 예비군 퇴역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예비군 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래의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위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주제어 : 예비군, 미래 안보환경, 혁신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경영학전공 박사과정(주저자) (E-mail: yunjunup@naver.com)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경영학전공(교신저자) (E-mail: staryoun@hanmail.net)

투고일: 2023년 10월 17일, 수정일: 2023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우리나라의 예비군은 창설 후 55년간 국가방위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무장 공비 소탕 작전과 재난 동원 등을 통해 그 존재 가치와 당위성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예비군 체제는 미래전 양상과 안보 환경 변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예비군 운용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신종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의 안보환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위협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전쟁, 정보전 등의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예비군은 이러한 신종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전투력 강화이다. 미래 예비군은 현대화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자율 로봇, 드론 등의 기술은 전투 환경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예비군의 기술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 강화이다. 미래의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은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훈련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예비군의 역량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운용의 혁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은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예비군 임무

1968년 4월 1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250만 재향군인의 무장을 선언하면서 창설된 예비군의 임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임무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예비군 임무 변천 과정

- ('68. 05. 29) 적 또는 무장공비 소멸, 무장공비 공격으로부터 피해 예방, 응급복구, 중요시설/병참선 경비 임무 수행 ⇒ “후방지역 방위”
- ('71. 01. 01) 전시·사변·비상시 현역군 편성이나 작전소요 동원 대비 ⇒ “준 상비군”
- ('72. 12. 30)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 “민방위대”
- ('80. 12. 31) 무장소요진압(경찰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준 경찰”

1968년 창설 당시 예비군의 주 임무는 적 또는 무장공비 소멸, 무장공비 공격으로부터 재난 대응과 응급 복구, 핵심 시설과 보급로 경비 등 후방지역을 방위하는 것이었다. 이후 1971년에 전시·비상시 현역군 편성이나 작전소요 동원에 대비하는 임무가 추가되면서 ‘준 상비군’화 되었으며, 1972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응급 복구의 ‘민방위 업무 지원’ 임무가 추가되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무장소요 진압(경찰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임무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변천 과정을 거쳐 정립된 오늘날의 「예비군법」 제2조에 명시된 예비군 임무는 <표 2>와 같다.

<표 2> 예비군 임무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 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출처 : 「예비군법」 법률(제19082호), 2023년 6월 14일 시행.

「예비군법」에 명시된 예비군의 임무를 크게 분류하면 ‘병력동원 대비’, ‘지역방위’, ‘재난 관리 지원’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 임무 3항의

‘무장소요 진압’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추가된 임무로 예비군 임무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배제하였다.

먼저 병력동원 대비이다. 예비군은 비상사태 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에 대비한다. 평시 병력동원 대상으로 지정되었거나 그 지정 연차에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 일자별 또는 소집부대별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 제대를 편성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 소집에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방위이다. 예비군 부대의 편성과 작전지속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제한되므로 일일 단위 작전 교대가 가능한 제한된 범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지도발 대비작전 등 평시에는 목진지 검문소 등에 운용하고 전시에는 중요시설 병참선 동원자원 집결지 도시기반시설 방호와 지역 안정을 위한 목진지 검문소 제한된 기동타격대 위주로 운용한다.

셋째 재난관리 지원은 평시 정부의 국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거나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재난대책본부 통제 하에 피해 복구나 구조를 지원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예비군의 임무는 시대 상황에 따라 부단히 변화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안보 환경과 국민 정서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추가된 ‘무장소요 진압’ 임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의 국력이 향상되고 상비군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UN 평화유지 작전 등 파병 임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 예비군의 역할¹⁾

예비군 또는 예비전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와 기관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길병욱 박사는 2015년 육본정책연구보고서²⁾에서 ① 국가안보의 한 축 담당, ② 경제적인 측면, ③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초기대응수단, ④ 한반도 주변 잠재위협에 대비, ⑤ 장차전에 대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배달형 박사는 ① 전쟁 억제 수단, ② 후방지역작전 수행을 위한 대응수단, ③ 전면전 시 초기공세 대비 및 적특수전부대 배합전 수행 대비, ④ 안정화작전의 핵심역할, ⑤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수행 기여, ⑥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 지원 등을 들고 있다.³⁾ 이외에도 박계호 박사, 이원희 박사 등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예비전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정진섭, “통일 이후 한국의 예비전력 운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8), pp.19~21.

2) 육군협회 편,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안』, 육군정책보고서(2015), pp.14~15.

3) 배달형·김성규,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역할 정립과 한국군 과제”,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3호(한국국방연구원, 2011), pp23~2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비군은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해 상비군의 동반 전력이자 필수 전력으로 신뢰성 있게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력 기획 과정에서부터 상비전력과 균형을 맞춰 적정 규모를 편성하고, 위협 양상별 운영 개념을 정립해 국방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군에서 예비군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총력방위 수행 보장이다. 현재 및 잠재적인 적을 고려할 때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총력방위를 수행해야 한다. 예비군은 감소 편성되어 있는 상비군을 확장하고,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손실보충자원으로 활용되며, 후방지역 방위를 통한 지역안정과 작전지속능력의 확보·유지를 지원한다. 따라서 예비군은 국가 가용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유효한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가교로써 국가총력방위 수행에 기여한다.

둘째, 강력한 예비군의 보유는 동맹 전력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 수단 중 하나이다. 국방백서에서 예비군의 규모를 공개하는 것은 전쟁 억제력의 일부로서 역할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예비군을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국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시에 필요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모두 준비하려면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한데, 예비군은 이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150만 명에 이르는 전시 소요 병력을 평시부터 유지하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미국의 경우 국방비의 9%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병력 대비 38%의 예비군을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⁴⁾

넷째,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역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주변국들과 정치, 군사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영토 문제, 역사 인식 문제, 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 자원 문제, 환경 문제, 무역 분쟁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이 보통국가로 변신하면서 상비전력을 확장하는 상황은 한국의 안보환경에서 예비군을 신뢰성 있는 전투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섯째, 국민들은 평시에 군사적 위협보다 자연재해,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더 민감할 수 있는데, 예비군은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태풍, 폭우,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산불,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확산 등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여섯째, 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동참하는 역할이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UN 평화유지작전 등 국제사회

4) 신다윗·정철우, “미국 예비군의 발전사례를 통한 한국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650호(한국국방연구원, 2016), p.3.

활동에 군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예비군의 참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역 감축으로 인한 파병 병력 차출의 어려움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예비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일곱째, 군비통제 대안으로서의 예비군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전쟁을 피하자는 목표 아래 군비 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다수 국가는 병력과 무기 등에서 감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국가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줄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명확히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각국은 이전보다 예비군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상비군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즉, 예비군을 은폐 전력으로 두어 실질적인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개념인 것이다.⁵⁾ 미래에 한국이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면 주변국의 견제를 받을 것이고, 자의 반 타의 반 군비 통제가 필수적일 것인데,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대체 전력으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3. 예비군제도 영향요인

미래 예비군제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군제도에 <표 3>과 같이 외부환경요인과 내부환경요인, 조직가치요인 등 3가지 영역에서 8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예비군제도 영향요인

외부환경요인	내부환경요인	조직가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 안보환경과 전쟁양상 • 무기체계 및 과학기술 발달 • 군사·비군사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병력·예비군자원 감소 • 국방개혁과 예비전력정책 •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상과 전통 • 예비군 운용 경험과 교훈

*출처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가 예비전력 연구』, 2023.

1) 외부환경요인

가. 거시적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21세기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주변국 간에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인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와 고효율적인 합동작전 지휘체계

5) 장병욱, “예비군제도의 새로운 인식”, 『국방동원의 과제와 전망』(한국국방연구원, 1996), p.223.

구축 등을 추진하며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방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 영토 또는 인근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국가 총력방위체계 구축 차원에서 예비군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미래전 양상의 변화도 예비군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무기체계 및 과학기술의 발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체계, 원거리·초정밀·초고속 미사일, 정찰·타격 복합체(RSC), 드론, 우주무기, 사이버전, 지향성 에너지 및 비살상 무기 무인 자율 무기체계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과감한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⁶⁾ 주요 선진국들은 최신 무기체계 전력화에 힘입어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까지 획기적으로 바꾸는 폭넓은 군사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군도 한국적 특성에 부합한 무기체계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고가의 장비인 군사혁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는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상비군 위주로 전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비군이 미래 국방 전력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하려면 부대 기능과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수준으로 편제에 반영해 전력화해야 한다. 예비전력 부대의 임무와 역할에 최적화된 무기체계 소요를 상비전력 소요 제기와 함께 반영하고 전력화해야 하며, 이는 상비부대와 동일한 수준일 필요는 없다. 특히 지역방위 부대와 전쟁 지속 단계에서 창설하는 부대 등은 민간 자산과 업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 군사·비군사 위협

김정은은 2022년 6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다.”⁷⁾고 밝힌 바대로 북한 위협은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6) 정춘일, “제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한국군사』, 제6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pp.15~18.

7) 연합뉴스(22.6.11.), 김정은 “강대강·정면승부 투쟁”... 전원회의서 핵 언급은 없었음.

최근 김정은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2023.4.25.)에서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비군이 주로 운용되는 후방지역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평소 적의 군사 위협은 기존 재래식 침투·도발에 의한 효과 감소, 우리의 감시능력 향상으로 지상·해상·공중을 통한 무장 인원의 직접 침투는 지양하되 밀입국, 탈북을 가장한 침투, 제3국 경유 등의 우회 침투증가가 예상된다. 전면전 시에는 아군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고 전력증원을 방해하기 위해 특수전 부대,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무인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요시설, 병참선,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아군의 감시 및 정밀타격능력이 향상되고 적 침투수단은 노후화됨에 따라 아 후방 중심으로의 적 직접 침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도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의 일상화, 테러리즘과 사이버공격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사·비군사 위협을 고려하여 후방지역을 방호하는 지역방위사단과 지역예비군 부대의 규모와 부대구조에 대한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2) 내부환경요인

가. 인구, 병력, 예비군자원 감소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위 출산율 적용 시 총인구는 2022년 5,166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저출산은 향후 수년 이내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병력 충원과 예비군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병역대상자 감소추세는 <표 4>와 같으며 20세의 모든 남성이 전원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가정할 때 2022년에 최대 징집 가능한 규모는 중위 추계 기준시 약 27 만여 명이며, 2025년에는 23.5만 명, 2037년부터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약 15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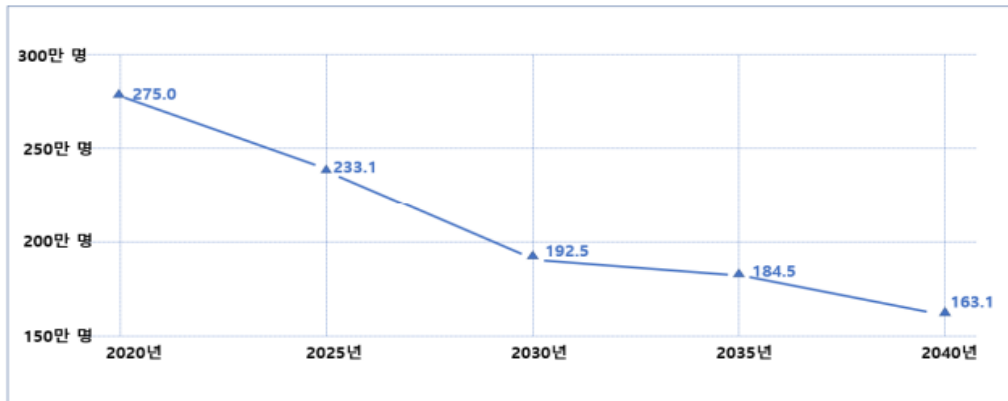
<표 4>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추계 (단위: 명)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중위 추계	258,768	259,374	239,376	233,182	242,038	255,981	238,784
연도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중위 추계	235,488	252,988	248,807	243,197	229,191	232,995	226,493
연도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중위 추계	204,882	185,882	171,974	157,964	147,847	139,810	132,539

출처: 통계청(<https://kosis.kr/statHtml.do>), "20세 남자 인구 추계"(검색일: 2023. 12. 14).

이러한 추세라면 상비병력의 규모도 2025년 50만 명에서 2040년 이후에는 35만 명 이하 수준에서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예비군자원 감소로 이어진다. 예비군자원 변화 추세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출산율과 현역 병력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25년 230만 명에서 '30년 190만 명, '35년에는 180만 명, '40년에는 약 16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가 예비전력 연구』, 2023.

<그림 1> 예비군자원 변화 추세

이러한 추세를 볼 때 2차 인구절벽이 진행되는 '30년대 후반부터는 병력동원 소요 대비 동원예비군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그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원예비군 자원의 추가 확보 내지는 병력동원 소요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 국방개혁과 예비전력정책

우리 군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변신을 도모하면서 상비군 감축을 상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비전력 분야에서는 부분 동원 가능한 법률 제정(2011년), 병력 동원 지정체계 권역화로 개선(2012년), 전시 부대 단위 집단 보충 체제 구축(2009~2016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 착수(2014년~),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도입(2014년), 동원전력사령부 창설(2018년), 국방대학교에 예비전력연구센터 설치(2018년), 비상근 예비군제도 법제화(2021년)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상비전력의 혁신 추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래 예비전력의 혁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예비전력정예화 개념을 재설정하고, 비상근예비군 운용 확대를 통해 병력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육군장기군구조(안)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지역예비군부대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

미래 예비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환경변화 요인은 도·농간 자원 불균형과 후방지역 작전환경 변화, 국민의 의식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원 불균형 문제는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8개 특별·광역시에는 국토의 약 6%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44%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과 소도시 지역은 국토의 94%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5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읍·면·동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 중대의 자원 불균형이 심각하며, 작전 소요가 적은 대도시 지역으로 예비군 자원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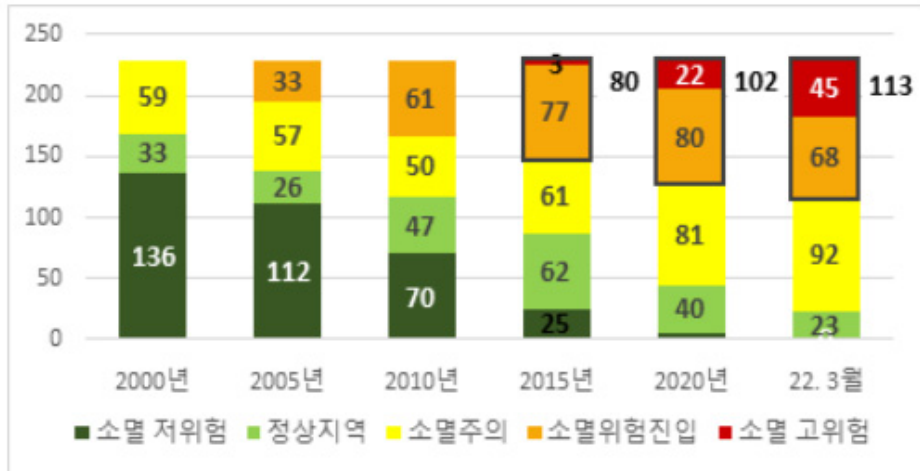
<표 5> 특별·광역시, 기타 행정구역 인구분포

구 분	계	특별·광역시(7)	기타 행정구역
면적(비율)	50,293km ² (100%)	5,313km ² (10.5%)	44,980km ² (89.4%)
인구(비율)	51,738,071명(100%)	22,217,172명(42.9%)	29,520,899명(57%)

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rtHtml>(검색일: 2023. 12. 14).

지방사회의 공동화 현상은 기초지자체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그림 2>와 같이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

(49.6%)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2020년의 102곳보다 11곳이 늘어난 수치로, 읍·면·동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 중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시·군·구 또는 권역 단위로 편성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그림 2>와 같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2. 4. 29)

<그림 2>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지역예비군의 전장(戰場)인 후방지역의 작전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줄어들고 있으며, 첨단 사회시스템의 고도화는 취약지역을 감소시켜 적의 은밀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반면, 아군에게는 병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법·교통·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되고 이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지자체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 시설과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편화는 적을 발견하기 위한 예비군의 고정배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집중적이고 기동화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국민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인터넷 기반 소통으로 ‘공정’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정당한 보상 없는 무상 예비군 복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으며,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의 무기와 장비로는 전투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3) 조직가치요인

가. 군사사상과 전통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당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의 안보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조선의 의병들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애국, 애족, 애향의 정신으로 자주적 무력투쟁을 실시하여 외적을 물리치는 범국민적 총력전을 수행하였다.⁸⁾ 아울러 지방군은 국방력 생성의 원천으로 중앙군은 지방에 군적을 둔 번상군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지방군이 잘 조직되고 잘 운용되었던 시대에는 강군의 면모를 유지하여 왔다. 1968년 창설된 현재의 예비군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력방위체계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미래에도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상무정신과 호국정신, 그리고 민병들의 국난극복 정신 등을 계승함으로써 자전자수의 국가방위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⁹⁾

나. 예비군 운용 경험과 교훈

6·25 전쟁 이후 7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군은 예비군을 동원하여 정규전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단지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대침투작전에서 지역예비군을 동원하여 운용한 경험이 몇 차례 있을 뿐이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연 31만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향방작전에 운용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대적인 보완과 제도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미래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방위작전 훈련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비군부대의 수준은 사실상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원수를 고려한 예비군부대 편성은 작전적 운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대작전 시행으로 작전 소요가 늘어남은 물론 지휘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자원의 도시지역 편중 현상으로 읍·면·동 단위 예비군중대 편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지방군)을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하여 외래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 온 것은 우리의 국가방위 사상이자 전통이요, 국가총력전 수행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예비군은 유지되고 정예화 되어야 할 것이다.

8) 양병선, 『동원발전론(동원사상 중심으로)』, 파주: 교육과학사, 2010. p.머리말 3.

9) 강용구, “21세기 한국의 동원사상(動員思想) 정립과 구현 방향 연구,” 『軍史研究』, 第151輯, 陸軍軍史研究所, 2021, pp. 22~24.

Ⅲ. 연구방법

문헌으로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국가 예비전력 연구”(2023)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학위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키워드 ‘예비전력 정예화’ 99편, ‘예비군 정예화’ 86편, 총 185편이 검색되었고, 이중 실제 예비전력 및 예비군 정예화와 관련된 19편의 논문 및 단행본을 가지고 문헌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연구의 흐름도

예비전력 정예화, 예비군 정예화로 검색된 논문 및 단행본 총 185편
↓
실제 관련 있는 논문 총 17편, 단행본 2편

Ⅳ. 연구결과

미래 국방 환경과 여건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의 한계점과 국방혁신에 따른 부대구조 개선의 제한사항을 예비군제도 혁신을 통해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총체 전력의 한 축으로써 신뢰성 있는 예비군을 육성하고 운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련 논문 및 책자를 연구한 결과, 예비군 혁신과제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예비군 작전운용개념 발전, 둘째, 지역 예비군부대 개편, 셋째, 비상근 예비군제도 확대, 넷째,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다섯째, 예비군 자원 확충, 여섯째,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비군 작전운용 개념 발전

미래전 양상과 사회 및 자연환경의 변화는 후방지역작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 후방지역의 작전환경은 4차 산업혁명 고도화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디지털기반 네트워크화된 기반시설 증가로 적 공격 및 테러에 취약한 반면, 방범용·교통용 CCTV(통합관제센터) 등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적 활동 탐지는 용이하여 예비군 배치 소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도로망의 발달과 해안선 지역 개발로 연륙교, 간척지, 방조제, 도로망 등이 발달하여 적 침투지역이 감소하고 감시장비 운용으로 병력 절약 여건이 조성되며, 아군의 기동화 작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반면에 내륙지역은 대부분 산악지역과 울창한 삼림이 형성되어 적 침투 및 은거에 유리한 면도 있으나 산불·재난 감시용 CCTV 등 설치로 병력 배치 없이도 적 활동 탐지는 용이한 면이 있을 것이다. 인구분포의 양극화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지역별 예비군 가용자원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상비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능력기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군부대 편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드론, 저격용소총, 조준경, 감시장비 등 무기체계의 변화도 예비군부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지역방위작전간 예비군 운용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과 아 능력, 작전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적 위협을 분석하여 대비한다. 적 침투가 제한되는 지역은 감시장비 위주로 운용하여 병력을 절약하고, 기동성 있는 전력으로 배비한다.

둘째, 작전 환경 변화와 가용 작전요소를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 즉,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가용 예비군 규모와 방호해야 할 중요시설 등을 고려하여 작전수행 방법을 차별적으로 발전시킨다.

셋째, 민·관·군·경 가용 작전요소를 통합 운용한다. 각종 감시수단 활용을 통해 병력의 고정배치를 최소화하고, 기동예비로 운용하며, 교통 및 방법용 CCTV, 경찰 차량 자동인식시스템, 수배차량 조회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CCTV 통합 관제센터와 관련 기관에 군 요원을 배치한다.

넷째 예비군 동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동원을 하게 되면 즉각 운용할 수 있도록 평시예비군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예비군 작전 운용 개념을 미래전 양상과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에 맞춰 발전시킨다면, 효율적인 예비군 배치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작전 수행으로 작전 성공률을 높이며, 민·관·군·경 통합 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2. 지역예비군부대 개편

지역 예비군 부대의 개편은 지역방위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 지역예비군부대는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 수에 따라 부대 구조가 달라지는 비정형화된 부대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수개의 읍·면·동을 통합하여 예비군 중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자원이 많은 지역은 하나의

등을 2개의 예비군중대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등 심각하게 비표준화 및 비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장예비군부대 역시 자원 수에 기반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작전운용과는 심각한 부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와 상비병력 감소의 영향으로 후방 지역에서 지역방위사단과 지역예비군부대를 중복 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미래 지역예비군부대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예비군부대의 편성은 궁극적으로는 지역방위사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 이전단계로 현행 읍·면·동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중대를 현역대대(시·군·구) 단위 예비군지역대로 정형화 편성한다.

둘째, 예비군지역대는 본부편성을 보장하고 보급·수송, 통신, 정보 기능 직할조직을 편성함으로써 자체적인 작전 및 작전지속지원 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셋째, 직장예비군부대는 ‘작전부대’와 ‘자원관리부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작전부대는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반드시 방호가 필요한 시설에 편성하되 자체 자원부족 시 지역 예비군자원을 지원하여 완전하게 편성하며, 자원관리부대는 대학 등 대규모로 예비군이 소속된 시설과 직장에 편성하여 평시 교육훈련과 자원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 예비군 부대를 위와 같이 개편하게 되면, 지역방위 작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비군의 전투력과 자원 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3. 비상근예비군 확대 운용 및 복무여건 개선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민간인력 확충과 간부요원을 보충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급간부와 군무원의 충원율이 저조함에 따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력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주요 직위자와 숙련된 전투요원의 충원함으로써 적시적인 부대확장과 동원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인력보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근예비군제도의 확대 운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추진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병력 감축의 공백을 상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현역에 준한 비상근예비군의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근예비군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비상근예비군 운용 관리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제도 발전을 도모한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용함으로써, 평시에는 숙련된 전투 요원을 확보하여 부대

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시에는 비상근 예비군을 즉시 동원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다. 또한,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예비군보류제도 개선

예비군의 보류제도 중 예비군훈련 면제는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합리적 차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전시 국가기능 유지와 방위산업 업체의 필수 요원 등은 동원지정을 후순위로 조정할 수는 있으나 예비군 훈련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이다.

많은 학생과 해외 출타로 인한 보류 혜택은 근본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훈련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예비군 복무를 연장해서라도 훈련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예비군훈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5. 예비군 자원 확충

1) 예비군 진급제도 개선

우리 군의 간부예비군 동원지정률은 소요에 비해 약 50% 수준에 불과하여 예비역 진급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당 계급자의 지정률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구조적인 이유로 예비역의 자원 공급이 적은 계급(상사, 원사, 소령, 중령)의 경우 요구 계급 지정률이 저조하여 예비역 진급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있으나 요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소요가 많은 병장에서 하사계급으로의 진급이 제한되고, 차상급 계급까지 1회에 한하여 진급이 허용되는 등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 여성예비군 퇴역제도 개선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여군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2020년 기준 장교의 경우 9%, 부사관의 경우 6.4%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은 자동으로 퇴역 조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예비역 편입은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¹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간부 동원자원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군도 남군과 동일하게 예비역에 편입되도록 군인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10) 군 인사법 제41조(퇴역)에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반인의 유급 지원예비군 제도 도입

군이 무기체계와 각종 운용체계가 첨단화, 전문화되면서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군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예비군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유급 지원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예비군 교육훈련체계 발전

한국군에서 예비전력은 병력 기준 65%를 차지하는 전쟁수행의 핵심전력으로써, 예비전력부대의 전투력 발휘는 전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예비군 전투력 창출의 핵심 요건인 예비군 훈련체계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원훈련은 1994년 이후 1년에 한 번, 2박 3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예비군도 기본 훈련 8시간과 작계 훈련 12시간 등으로 요망하는 전투력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감염병의 확산과 재해재난 등의 이유로 계획된 훈련이 취소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재 여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감염병과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서도 간단없는 예비군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원격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가상공간에서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며, 점차 정상적인 예비군훈련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병과학교와 예비전력교육단에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메타버스에 탑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현역·예비역 연계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역복무 기간 중에 동원지정부대를 분류하고 병과별 동원부대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제된 무기와 장비를 숙달하는 훈련을 전역 전에 실시함으로써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상근예비군 기반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훈련기간 연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주요 직위자를 비상근예비군으로 확대 편성하여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전투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래 예비군 운용 혁신 방향’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군 체계를 미래 안보 환경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업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에는 전통적인 위협과는 다른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전쟁, 정보전과 같은 신종 위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비군은 이러한 신종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현대화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예비군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자율 로봇,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투 환경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방법과 훈련 모델을 개발하여 예비군의 역량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상황에서 예비군을 유지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상근 예비군의 확대 운용과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진급제도 개선과 여성 예비군 퇴역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미래 예비군 운용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는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비군과 관련한 연구데이터와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선행연구가 부족했으며, 연구 결과를 실제 예비군 혁신에 적용하는 것은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예비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관, 정부, 군 기관, 민간 단체 등 각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예비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용구(2021). 21세기 한국의 동원사상 정립과 구현 방향 연구. 군사연구. 151. 육군군사연구소. 22-24.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2023). 국가 예비전력 연구. 155-222.
- 국방부(2018). 예비군 50년사.
- 국방부(2023).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국방부(2023).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군 인사법(2023). 법률 제19787호.
- 배달형·김성규(2011).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역할 정립과 한국군 과제. 한국 국방연구원. 23-24.
- 신다윗·정철우(2016). 미국 예비군의 발전 사례를 통한 한국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1650. 한국국방연구원. 3.
- 양병선(2010). 동원발전론(동원사상 중심으로). 파주: 교육과학사. 3.
- 예비군 법(2023). 법률 제19082호.
-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2023). 국방부.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23). 국방부.
- 육군협회(2015).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안. 육군정책보고서. 14-15.
- 윤태영(2005).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 이기택(1995). 국제정치사. 일신사.
- 이원희(2014). 예비전력.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장병욱(1996). 예비군제도의 새로운 인식. 한국국방연구원. 223.
- 정진섭(2018). 통일 이후 한국의 예비전력 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21.
- 정춘일(2019). 제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한국군사. 6.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5-18.
-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2022. 4. 29).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Innovation Direction of Reserve Forces Operations

Yun, Jun-Up* · Youn, Chun-Sung**

*Ph.D.'s Course, Managemen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First author)

(E-mail: yunjunup@naver.com)

**Professor, Managemen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Corresponding)

(E-mail: staryoun@hanmail.ne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optimizing the reserve forces system of Korea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the innovation direction of reserve forces in the future. The study method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papers, books, and government reports related to reserve forces to provide theoretical grounds and cases for the future innovation direction of reserve forces work.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eserve forces of the future should strengthen their combat power by actively utilizing modern technology, and that effective operation methods and strategies of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robots, and drones should be sought.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reserve forces' ability to respond quickly and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to secure reserve forces personnel in an era of declining population through expansion of part-time reserve forces and improvement of the retirement system for female reserve forc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policies and improve systems for the future innovation of reserve forces work. However, since new threats are likely to emerge due to future security environmen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develop and effectively operat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against them.

Keywords : Reserve Forces, Future Security Environment, Innovation